

내수 대책 준비 지시한 文 2차 지원금 논의 착수하나

“경제·민생 미치는 영향 점검해 기존 비상경제 대책 보완·추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선제적 경제 대응을 주문하면서 당정청이 공식 '보류' 결정을 내렸던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시행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비상한 경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미칠 경제 충격을 우려해 비상한 각오로 경제 대응에 나서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 반등의 속도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며 “특히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와 내수가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고, 골목상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조금씩 활력을 되찾던 도·소매업과 관광·여행업,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도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고강도 거리두기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이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경제 경고음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담겼다.

문 대통령은 이에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경제 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소비 진작과 내수 활력을 위한 대책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같은 선제적 경제 대응 지시로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당정청은 지난 주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방역에 최선을 다할 때 라며 추가 논의를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청와대 역시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방역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주 400명대에 육박했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200명대로 접어들기 시작했고, 문 대통령 역시 이번 회의에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기조를 거듭 강조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빗발치고 있어 논의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정부의 입장은 유보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지급 가능성은 열어놨다.

2차 재난지원금 논의 공론화에는 선을 그었지만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로 ▲지급 범위 ▲대상 ▲방법 ▲시기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서 비상경제회의의 주제 의지를 과격했던 만큼, 차후 문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공식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선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갖고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 화상 국무회의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참석했으며 청와대에는 문 대통령과 참모진 사이에는 투명 칸막이가 설치됐다.

“광화문 집회, 법원 허가 잘못...천문학적 비용 초래”

정세균 총리 “방역·조사 방해 행위, 무관용 원칙·법 집행 철저히”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에서 운영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이번에 대규모 집회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허가된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정 총리는 “그런 집회를 허가를 하면 원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회가 진행될 것이라는 정도의 판단은 그것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것을 놓친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으로써 해서 지금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지금 2만 여명이 진단 검사를 했고, 그 숫자도 더 늘어나는 등 경제적으로도 보면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될 결과가 초래됐다. 이런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서울시에서는 일체 집회를 금지했고 경찰청에서는 서울시의 결정과 명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잘못된 집회의 허가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그런 상황 벌어진 것에 대해 너무 유감스럽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 15일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집회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간 연관에 대해 “매우 높다”며 “최근 확산세의 핵심적인 두 부분이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라고 했다.

이어 고의로 방역이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 관련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지을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인신구속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단순히 개인이 그치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법을 집행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안철수 “대놓고 불공정사회 지향...뻔뻔함도 넘어”

“공공의대 학생 시민단체가 추천? 제정신인가”

제2, 제3의 조국 자녀들이 판치는 기득권 사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의료계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공공의대 관련 시도지사나 시민단체가 입학생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는 논란에 대해 “이제 대놓고 불공정사회를 지향하겠다는 뻔뻔함이 도를 넘어 기가 막힐 지경이다. 정말 제정신이나고 문는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권이 추진하는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가 추천하겠다고 한다.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안 대표는 “제2, 제3의 조국 자녀들이 판치는 기득권 사회”라며 “이제 대놓고 불공정사회를 지향하겠다는 뻔뻔함이 도를 넘어 기가 막힐 지경이다. 정말 제정신이나고 문는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제2, 제3의 조국 자녀들이 판치는 기득권 사회”라며 “이제 대놓고 불공정사회를 지향하겠다는 뻔뻔함이 도를 넘어 기가 막힐 지경이다. 정말 제정신이나고 문는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제2, 제3의 조국 자녀들이 판치는 기득권 사회”라며 “이제 대놓고 불공정사회를 지향하겠다는 뻔뻔함이 도를 넘어 기가 막힐 지경이다. 정말 제정신이나고 문는다”고 밝혔다.

뉴시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229-6000
기사제보 222-2580
광고 직통 228-2580
팩 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